

O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답] ④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과는 다른 의결의 형식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예산과 법률의 비교

구 분	예 산	법 률
성립 절차	제출권자	정 부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심의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심의범위	정부동의 없이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불가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효 력	공 포	공포 불요, 의결로 확정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지역적 효력	국내·외 효력 발생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기 타	의사표시 대상	대정부 의회의 의사표시
	특 정	세입은 단순한 참고자료
	국 가	우리나라, 일본

□ 예산과 법률의 관계

예산과 법률은 별개이므로 예산으로 법률을,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 임혁 행정학 699P

O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 ① 소비자안전규제 ② 산업재해규제
- ③ 환경규제 ④ 진입규제

[답] ④ 진입규제는 협의의 경제규제이며, 나머지는 모두 사회적 규제이다.

◆ 경제적 규제

⑦ 개념: 전통적 규제로서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이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 하면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의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

라한다.

- ㉠ 사례: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 독과점금지 및 불공정거래 규제, ㉡ 가격규제(최고가격, 최저가격 등 요금승인), ㉢ 진입규제·퇴거규제, ㉣ 품질규제, ㉤ 직업면허, 수입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목적: 경제적 규제의 개념이 그것이 목적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져 내려진 것이어서 목적을 확립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경제적 규제도 나름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 소비자보호 목적: 독과점 규제, 부당이득 방지, 부당한 가격차별의 방지, 교차보조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
- ㉧ 생산자 보호의 목적: 과당경쟁의 방지, 산업육성, 불공정한 기업 간의 경쟁방지

■ 임혁 행정학 220P

O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 ④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답] ③ 전문화(분업)의 원리

행정능률은 전문화가 되면 될 수록 올라간다는 것이다. 본래 전문화는 작업과정을 세분해서 한 사람이 세분된 일부분만을 담당케 함으로써 작업의 전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전문화가 일어난다.

순기능	역기능
•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업무를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킴. • 반복적 업무 수행을 통해 업무의 능률적 수행 촉진 • 특정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유리	• 사람들이 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점 • <u>의사전달의 애로와 조정의 필요를 크게 한다는 점</u> •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 • 인적 전문화를 방해한다는 점 • 피로와 권태감을 크게 한다는 점 등에서 비판

■ 임혁 행정학 379P

O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 제안 규정」 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답] ②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① [X]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지고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다.
- ③ [X]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④ [X]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과 연공 중심의 인사체계를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의 비교

구 분	고충처리제도	소청심사제도
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심절차가 아니다.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법적 성질	• 행정소송과는 무관한 행정제도 • 처분성 부정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특별행정심판
심사의 대상	근무조건·처우 등 일상의 모든 신분상 문제가 대상이다.	공무원이 받은 신분상 불이익
관할 행정청	복수기관(중앙인사기관의 장·임용권자 등)이 관장한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전담한다.
결정의 효력 (기속력)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법적 기속력을 갖는다. • 행정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당한다.
기 간	기간제한이 없다.	기간제한이 있다.

■ 임혁 행정학 661P

O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② 환경영향평가
- ③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답] ②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부업무 평가의 종류

(1) 중앙행정기관 평가

- ①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2/3 이상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이나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부처별로 전체 성과목표 중 매년 1/3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을 자율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 ② 재평가: 국무총리는 자체평가결과를 확인·검토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일종의 메타평가(상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 ①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평가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에 대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합동평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위임사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특정평가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평가는 기관의 특수성 및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외부의 기관이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를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 임혁 행정학 360P

O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답] ③ 문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구체화이다.

◆ 정책문제의 구조화

- ① 정책문제의 본질, 범위, 심각성에 관한 정보는 정책문제의 구조화라는 정책분석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산출될 수 있다. 문제구조화는 정책분석가가 이해관련자들의 대립되는 문제형성 사이에서 문제를 탐색하는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 ② W.Dunn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단계를 ㉠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등 4가지의 독립된 단계를 제시하였다.
- ③ 목적 및 성질: 정책문제의 구조화는 정책분석의 가장 고차원적 요소로서 제3종 오류를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문제의 정의는 근본적으로 주관적·질적일 수밖에 없어 정책문제의 구조화는 주관적·질적 분석이 활용된다.
- ④ 정책문제 구조화의 기법

◆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방 법	목 적	절 차	지식출처	성과 기준
경계분석	메타문제 경계 추정	포화표본출, 문 제도출, 축적	지식체계	한계에 있어서 정확성
분류분석	개념의 명료화	개념의 논리적 분할 및 분류	개별분석가	논리적 일관성
계층분석	가능하고, 개연적인 행동가능한 원인식별	원인의 논리적 분할 및 분류	개별분석가	논리적 일관성
시네틱스	문 제들 사이의 유사성인식	개인적 · 직접적 · 상징적 · 환상적 유추구성	개별분석가 및 집단	비교의 개연성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목표, 전략의 생성	아이디어 생성과 평가	집 단	의견의 일치
복수관점분석	통찰력 생성	기술적 · 조직적 · 개인적 관점의 사용	집 단	개선된 통찰력
가정분석	갈등 있는 가정들의 창조적 통합	이해관련자 식별, 가정도출, 도전, 집합, 통합	집 단	갈 등

■ 임혁 행정학 291P

0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답]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적 접근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보다 계층적 통합성(hierarchical integration)이 높은 일사분란하고 단순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 Sabatier & Mazmanian의 집행 영향요인

1. 문제의 용이성: ① 인과관계 및 적절한 기술의 존재, ②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 ③ 대상집단의 규모, ④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도
2. 법적 요인(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능력): ① 법규상 목표의 우선순위의 명확성, ② 재원, ③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성(hierarchical integration), ④ 집행기관의 결정규칙, ⑤ 집행담당공무원 및 집행기관의 자세, ⑥ 국외자(局外者)의 공식적 참여와 감독
3. 정치적 요인(비법률적 변수): ① 사회·경제·기술적 상황과 여건, ② 대중매체의 관심, ③ 일반대중의 지지, ④ 관련집단의 자원 및 태도, ⑤ 지배기관의 후원과 관심

■ 임혁 행정학 330P

0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 ②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④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답] ③ 행정기관은 정책과정에 깊이 간여한다. 법률에서 위임한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정책에 관한 입법을 제안하며, 법률의 시행에서 재량권을 행사한다.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정책과정 참여의 중요수단이 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을 수행하는 경우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법률 제정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이다.

■ 임혁 행정학 229P

0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른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답] ④ ④는 V.Vroom의 기대이론이 아니라 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 ① [O] 기대감(E)
- ② [O] 수단성(I)
- ③ [O] 유의성(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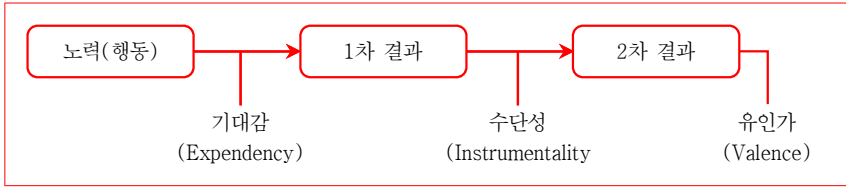
◆ Vroom의 기대이론: VIE이론

① 개인이 높게 평가하는 가치와 개인이 선호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에 대한 평가인 기대가 동기를 결정한다.

② 동기 부여의 강도(Motivational force)

$M(\text{motive}) = f(\text{Expectancy}, \text{Instrumentality}, \text{Valence})$

$M(\text{motive}) = (A \Rightarrow P1) (P1 \Rightarrow P2) \times V$ (A: 개인의 능력 또는 노력, P1: 1차 성과, P2: 2차 성과, V: 유인가)



임혁 행정학 473P

10.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적을 반영하여 책정된다.
-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답]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기본연봉만 지급)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부총리 및 감사원장,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기본연봉 + 성과급)	1급부터 5급까지 또는 1급 상당 공무원부터 5급 상당 공무원까지[5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①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②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은 제외한다)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기본연봉(직무급) + 성과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매우 우수 등급(성과연봉 기준액의 18퍼센트), 우수 등급(성과연봉 기준액의 12퍼센트), 보통 등급(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혁 행정학 650P

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 속도(velocity)
- 다양성(variety)
- 크기(volume)
- 수동성(passivity)

[답] ④

빅데이터(big data)란 데이터의 생성·양·주기·형식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3V로 요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형태의 다양성(Variety)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치(Value)나 복잡성(Complexity)을 덧붙이기도 한다. 이문제는 2016년 국가직 9급 문제와 유사하다. 5월1일 문제풀이시간때도 강조되었다.

◆데이터, 정보, 지식, 빅데이터의 차이

형태	정의	사례
데이터	사건, 상황 또는 상태를 설명, 분석,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자, 숫자, 기호의 단편적인 조합	회상에서 집으로 갈 때, 걸리는 시간: 고속도로 40분, 고속화도로 50분, 국도 60분
정보	사건, 상황 또는 상태를 설명, 분석, 이해한 내용으로서 데이터의 의미 있는 조합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함. (데이터+가치)	회사에서 집으로 갈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40분이 걸린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000원을 내야 한다.
지식	판단, 경험, 규칙에 의해 정보를 가공하여 보다 가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킨 정보로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생성 및 의사결정시에 사용됨	회사에서 집으로 갈 때, 일찍 또는 늦게 퇴근할 때는 고속화 도로를 이용하지만 교통이 혼잡할 만한 시간에는 1,000원을 부담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어느 시점을 지나서는 바깥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 (가치=시간, 돈의 절약)
빅데이터	빅데이터(big data)란 데이터의 생성·양·주기·형식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3V로 요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형태의 다양성(Variety)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치(Value)나 복잡성(Complexity)을 덧붙이기도 한다.	① 다양성(Variety) - 빅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를 넘어 문자, 오디오, 비디오, 클릭 스트림, 로그 파일 등과 같은 모든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② 속도(Velocity) - 빅 데이터는 분초를 다투 만큼 시간에 민감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즈니스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기업 내에서 스트리밍 형태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볼륨(Volume) - 빅 데이터는 크기 자체가 대형이다. 기업들의 데이터는 테라바이트 급 또는 페타바이트 급의 정보가 축적될 정도로 방대하다.

임혁 행정학 844P

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 작업 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답] ①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료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불확실성), 구조적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 임혁 행정학 412P

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공기업은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답]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하지만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하여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 법률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8항)고 규정하고 있다.

■ 임혁 행정학 37P, 54P

14.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답] ④ 제시문은 예산총계주의(완전성원칙)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는 국가재정법상 ①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②의 현물출자, ③의 차관전대가 포함된다. ④의 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외에서 제외되었다.

◆ 「국가재정법」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1)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란 국가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여권발급 수수료나 공무원시험 응시료와 같이 공공 서비스 제공에 따라 직접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시설의 생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대체경비로 지정하고,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초과지출을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통일성, 완전성원칙의 예외).

(2)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관에 자본으로서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금이 신규로 소요되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정부출자기관의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의 구성만 변동되고 현금의 수입·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여 「국가재정법」은 현물출자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전대차관

① 개념: 전대차관은 정부가 국내 거주자인 실수요자에게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관도입 시 계약 당사자는 차관 공여자(외국 금융기관 등)와 대한민국 정부이지만 차입된 자금의 실수요자는 기업과 같은 국내 민간부문이 된다(예1998년 IMF 구조조정차관).

② 전대차관의 예산 외 운용

전대차관을 도입할 경우 한국정부는 차관을 공여한 외국과의 관계에서 차주의 지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연계창구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차입된 자금은 국내민간부문에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전대차관을 예산에 계상할 실익이 높지 않으며, 예산에 계상하면 재정규모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대차관의 도입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고 있다.

(4) 차관물자대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란 외국의 실물자본을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대금결제를 유예하면서 도입하는 것으로, 차관물자대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되,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임혁 행정학 751P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 ③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 ④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답] ②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로 분류된다.

◆ 행정통제의 유형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의 유형을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하고 통제방법(통제기구와 절차) 등

이 법률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식통제와 비공식 통제로 구분한다.

구 분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내부통제	•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 상관에 의한 통제 •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 관리기관에 의한 통제 •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 기능적 책임에 의한 통제 • 대표관료제에 의한 통제 • 행정문화에 의한 통제 • 비공식집단에 의한 통제 • 공익에 의한 통제
외부통제	•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사법부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 민중통제(국민에 의한 통제) • 언론통제 •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 정당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 및 고객에 의한 통제

■ 임혁 행정학 803P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답] ②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례로 규율할수 없다.

◆ 지방세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 내의 주민, 재산, 기타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직접적,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재원이다.

(2) 특징

- ① **법정주의**: 법률에 근거하여 징수한다(조례로는 세율과 종목을 정할수 없음).
- ② **강제적 부과·징수**: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한다(사용료, 수수료와 다름).
- ③ **일반적 재원조달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 ④ **금전으로 표시·납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표시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 ⑤ **독립세주의**: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이 분리되어 있다(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 ⑥ **분리과세주의**: 지방자치단체별 독립적으로 과세한다(다만, 서울특별시는 재산세에 대해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 임혁 행정학 913P

17.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답] ③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지방교부세

종 류	개 념			재 원	용 도	교부주체
보통 교부세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 재원	행정 자치 부 장관
특별 교부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	40/100	행자부 장관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 재원	행정자치 부장관 & 국민안 전 처장관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	50/100	국민 안전처 장관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 정책, 재정운용실적 우수시 등 교부	10/100	행자부 장관			
소방안 전교부 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 정산액	특정 재원	국민안전 처 장관
부동산 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정산액	일반 재원	행정 자치 부 장관

■ 임혁 행정학 929P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②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 ③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 ④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답] ④ 배태성(embeddedness)이란 개인들이 행동할 때 사회규범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과의 경제적 합리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회관계에서 정당성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한다. 심지어 어떤 제도적 관행이 조직의 효율성 면에서 역기능적인 경우에서조차 사회적 정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채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제도적 변화는 일정한 과정을 겪으면서 특정한 형태를 띌 수 있는데, 그 하나의 형태가 제도적 동형성(institutional isomorphism)의 개념이다.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력은 조직 자체 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조직이라는 거시적 수준(macro level)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거시적 수준의 영향력은 모든 조직들에게 일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제도적 동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적 동형성의 논리는 서로 상이한 사회적·정치적 여건 속에서, 비슷한 형태의 제도가 왜 출현하게 되는가를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다.

■ 임혁 행정학 169P

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② 「정부기업예산법」
- ③ 「예산회계법」
- ④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답] ②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은 기업 특별회계로,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된다.

◆ 「정부기업예산법」

(1) 의의: 정부기업(양곡관리·우편·우체국예금·조달)에 적용되는 법률로써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에도 적용된다.

(2) 발생주의 원칙: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는 발생주의가 적용된다.

(3) 감가상각제도: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4) 손익계산의 명확화: 감가상각 및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손익계산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수입금마련지출제도: 경영상 초과수익 발생시 당해 사업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수입금마련지출제도가 적용된다.

(6) 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을,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회계법」을, 수입과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 임혁 행정학 694P

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

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답] ③ 반대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취임(정치적 임용)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과,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무직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 임혁 행정학 576P